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2017

연간보고서

공감 소개	03	공감이 걸어온 길	56
사진으로 보는 2017년 공감	04		
		공감 살림살이	58
공감 마당	08	공감 나눔 밥상	60
인권법캠프 08			
월례포럼 10			
자원활동 12			
청소년 인권 강좌 14			
			
공감 활동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62
여성인권 18			
장애인권 21			
이주/난민 25			
빈곤/복지 29			
국제인권 34			
취약노동 39			
성소수자 43			
공익법 일반 48			
공익법 교육/중개 52			
	16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64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공익 · 인권 · 법 재단 공감은
공익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2004년부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과 7월에 각 60명씩 참석하여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감 인권 법캠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참여





소통과 참여



공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공익변호사가 장래 희망이라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은 공감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자극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습니다.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공감에게도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공감
활동

공감은 연대의 시작이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질적인 존재들의 마주침과 뒤섞임,

흔들림 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토론이 공감을 가능케한다.

우리는 중심을 향하기보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각자의 경험에서 서로의 삶과 운동을 배우고,

사회적 차별을 해석하는 힘을 익혔다.

반복되는 사회의 거절과 친구의 죽음,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약속과 폭력 속에서

역설적으로 공감하는 힘과 맞서 싸우는 연대를 터득했다.

—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중 일부 인용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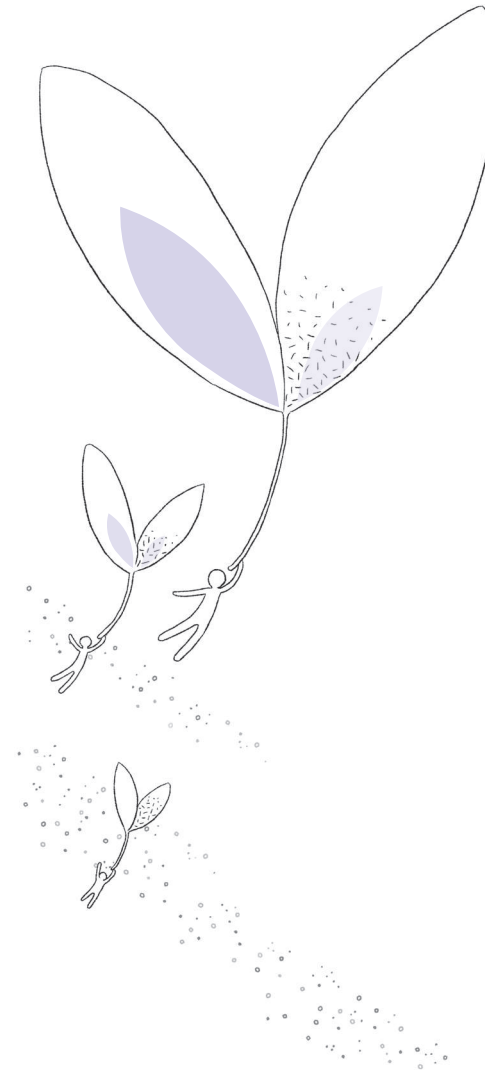
여성
인권

2013/08	민변 공동소송대리인단 구성, 1차 회의 개시
2014/06	원고들 지원단체별 소송설명회
2014/06/25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7/01/20	제1심 판결 선고
2017/03~12	항소심 변론
2018/02/08	항소심 판결 선고

한국전쟁 후 형성된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상황에 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로 불리우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은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미군 ‘위안부’로 이름 붙이고, 위안부 등록제나 애국교육, 성병 관리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했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이며 국가배상책임임을 저야 한다는 소송을 냈고, 공감은 소송 준비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공동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제1심 법원은 법의 근거 없이 감금하여 성병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원고 54명에게 위자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원고들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국가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군사동맹의 공고화나 외화 획득이라는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됨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는 불리한 조치로는, 해고, 징계, 비난, 집단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폭행 또는 폭언,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업무상 부당 대우를 망라합니다. 공감은 2차 피해를 입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민·형사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피해당사자 A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 파기환송심)을 대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감
활동

02

**장애
인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 승소
 전북 자립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 승소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 승소

전북 자립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
승소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활동

- | | |
|------------|--|
| 2017/01~12 | 염전도에 국가배상청구소송 |
| 2017/01~12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자문 |
| 2017/07~12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TF 위원 활동 |
| 2017/09~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관련 자문 |
| 2017/09~12 | 프로보노지원센터 공공후견법률매뉴얼 집필 참여 |
| 2017/09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대상 법률교육 |
| 2017/10 | 상주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 접근권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 화해권고 확정 |
| 2017/10~12 | 지적장애인 임금 미지급사건 항소심 |
| 2017/10 | 활동보조인 부당수급 형사사건 자문, 활동보조 수가 관련 토론회 토론 |
| 2017/1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와 인권 법률매뉴얼(공동집필) 발간 |
| 2017/12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공동집필) 발간 |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 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가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고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지역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며, 지척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그럼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졌다면 피해자 8명에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염전주의 학대로부터 피하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염전주에게 2차례나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만 경찰의 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시설 관련 대응 활동

- | | |
|------------|---|
| 2017/01~12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활동 |
| 2017/03~07 |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 2017/04 | 인강재단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사건 대리 |
| 2017/05 | 자립재단 원원해임명령 취소소송 피고 대리 대법원 승소 확정 |
| 2017/06 | 자립재단 법인설립허가취소소송 피고 대리 1심 승소 확정 |
| 2017/07 | 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 생활자 사망사건 형사고소건 상고심 피해자대리 |

2011년 전복에 있는 자립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립복지재단 내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립복지재단은 임원 전원 해임 명령을 내린 전북도를 상대로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라북도가 패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면서 공감 변호사도 전라북도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선 즉각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폭행과 별도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보아 임원해임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이 지난 5월 13일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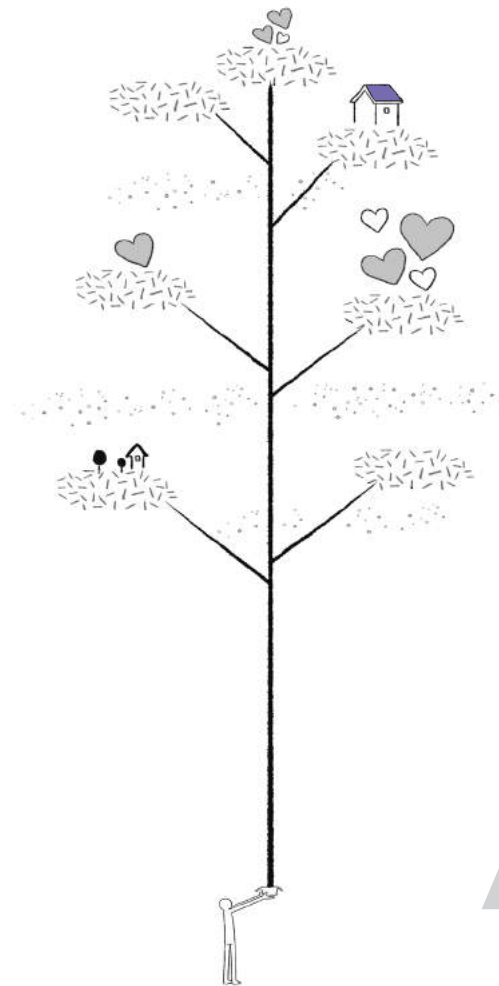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정신장애인 인권 활동

- 2017/01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 2017/01~04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대응작업
- 2017/01~1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교육
- 2017/02~03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대응활동
- 2017/02~07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통합지원조례안 작업, 제정활동
- 2017/07~08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인권 실태조사 참여
- 2017/09/05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 토론
- 2017/10~12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교육
- 2017/10~1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작업_ 정신병원 입원 법원심사방안

기존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필요성 판단을 병원 측에 맡겨왔습니다.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면서도 독립적 기관의 판단절차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한편 스스로 가족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그 신원확인을 엄밀히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장기입원 상태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입·퇴원 과정 전반에 걸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공감은 장애인권단체들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강제입원이 가능하려면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지난 12월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입원장애인의 신원확인을 게을리하여 부당한 장기입원상태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3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강제입원 남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공감은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에 감금된 삶을 벗어나 평등한 자유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감
활동

03

이주
/난민

이주가사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보장 방안 연구조사

영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승소

‘타자’로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활동

이주가사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보장 방안 연구조사

영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승소

- 2017/03 실태조사 기획
- 2017/04~07 이주가사노동자 관련 국내 문헌 연구 및 국내 법제도 조사
- 2017/05~09 이주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 2017/04~09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현황 및 외국 사례 리서치
- 2017/09 중간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
- 2017/10 전문가 그룹 인터뷰
- 2017/12 최종보고서 제출

한때 가사노동자는 파출부, 가정부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가사노동자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 등등 정확한 이름도 없이 온갖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많습니다. 주로 중고령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다 보니 언제인가부터 가사노동자 중에 이주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3만에서 최대 8만 명으로서 약 70%가 조선족, 약 30%가 중국 여성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입주가사도우미의 90%는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국내 노동자들보다 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비롯하여 그간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운동을 함께 해 온 사람들과 함께 시론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2016 피해자 면담
- 2017/03/15 소장 접수
- 2017/06/13~10/31 총 4차 변론기일 진행
- 2017/12/12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
- 2017/12/26 항소심 개시
- 2018/04/04 항소심 1차 변론기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절도사건의 진범에 의해 신분증이 도용된 A씨는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영사와 접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바로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변호인이나 영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모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요. 12월 12일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영사접견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A씨에 대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영사접견권을 외국인의 개인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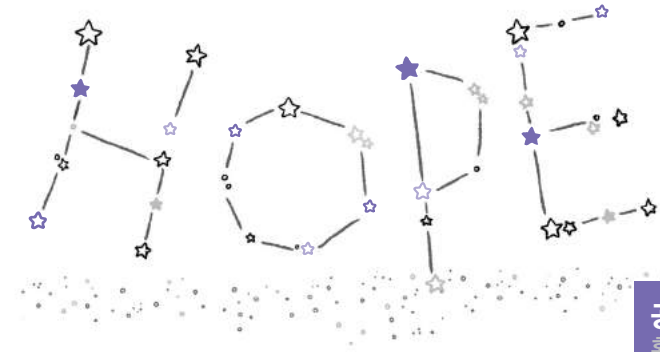
'타자'로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활동

- 2016/10~2017/0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이주정책포럼 토론회 개최(3회)
- 2017/04 대선후보 캠프 출입국관리법제 질의 및 난민법제 자문
- 2016/12~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 면담 및 법안설명
- 2017/08 국회인권포럼 한국 난민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난민법 개정방안 토론회
- 2017/09 서울행정법원 난민지원단체와의 간담회
- 2017/09 사법정책연구원 난민 인권과 사법 토론회
- 2017/09 심기준 의원실 출입국항 난민신청 토론회
- 2017/12 법무부 난민과 난민법개정안 간담회
- 2017/06~ 무국적 판정절차 연구조사 모임 (2017년 5회)

공감은 관련 단체 활동가와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단속과정 및 이주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10월, 2017년 4월 및 6월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주인권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활동가들의 열띤 토론을 거쳤고,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접촉하여 법안을 설명하고 발의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난민법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난민지원NGO네트워크 내 난민법TF를 주도하며 난민인정절차,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했고, 국회 토론회, 법무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개선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감은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최계영 서울대법원원 교수님과 함께 국내 무국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국적 판정절차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몰도바 등 관련 법제를 참고하기 위해 비교법 연구를 진행했고, 국내에서 무국적 판정절차와 무국적자 처우를 법제화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공감
활동

04

빈곤 / 복지



자활을 강요하는 국가와 목숨 바쳐 자활하는 국민
타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권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기준

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출생신고에서 배제된 아이들
-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다

자활을 강요하는 국가와 목숨 바쳐 자활하는 국민

2017/07~08 소송대리인단 결성, 소송준비 및 유족 면담
2017/08/28 소장 제출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급여지급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연금공단은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두 차례의 인공혈관 교체수술 후 9년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한 60세 남성에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 무슨 근거로 근로능력 있다는 것인지, “어떤 근로”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 다. 수원시는 남성에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니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급여가 삭감 또는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환갑인 데다가 체력이 평균인보다 훨씬 떨어진 남성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직을 희망하였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하였습니다. 취업 후 고열과 감기증상에 시달린 남성은 결국 3개월 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인공혈관 주변 감염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합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은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7. 8. 28. 공감은 유가족,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단법인 동천 등과 함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엉터리 근로능력평가를 한 국민연금공단과 수급권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을 통한 자활을 강요한 수원시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타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권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기준

2017/01~05/2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발족’, 거리 선전전, 대선후보 엽서쓰기 캠페인 등 참여
2017/07~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으로 재편, 공약이행 1인 시위 등 참여
2017/06/0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세션 발제
2017/09~2018/01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가족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 한들 내 재산이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인 가족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못하는 한 수급자격을 부정합니다.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수십만명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감은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을 결성하여 거리선전전 등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벌여 유력후보 대부분으로부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치는 내용으로, 여전히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공감은 인권단체 활동가, 학자들과 함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 세션을 맡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사회복지학계에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알렸고, 서울연구원에서 발주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9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의 사회권협약 이행상황 4차 심의에서 공감은 엔지오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위원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들을 설명하였고,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10월 발표된 최종견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 2017/01/13 사망 사건 관련 입양기관 방문 현장조사 진행
- 2017/03 아동보호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워크샵, 복지부 간담회, 입양부모 간담회 진행
- 2017/05/31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 2017/07/13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7/09/12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 2017/11/23 입양특례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
- 2018/01/16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발표

2012년 9월,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기관의 소개로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진지 5개월 만에 은비는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으나 예비 양부모측의 무마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응급실행에서 은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은 은비의 양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감은 사건 발생 직후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으로 꾸려진 민간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조사, 전문가 및 부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아동 이익 최우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입양절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원가정 양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입양 제도가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출생신고에서 배제된 아이들

-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다

- 2017/02/14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학자와의 간담회
- 2017/03/14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국회 간담회
- 2017/04/06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회의(2월~11월)
- 2017/07/05 보편적 출생신고 이슈 브리프 발간 기획(7월~11월)
- 2017/07/20 출생신고 법률지원단 활동(7월~12월)
- 2017/11/27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동이 존재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국적,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체류자격 등과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출생신고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가 발생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사로 보도되었던 “18년 동안 유명처럼 산 소녀” 사례가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게 하거나 최소한 출생 사실을 정부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의 도입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 이슈 브리프’를 기획·제작했고, 2017. 11. 27.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신고될 수 있도록 공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대만난민법 제정

라운드테이블

공감
활동

05

국제 인권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대만난민법 제정 라운드테이블
유엔 고문방지협약, 사회권협약 및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대응
기업 자문에서 법률가 교육까지, 기업과 인권, 그 지평을 넓히다

2017/02~04	APRRN 외국자문단 대만 난민법 제정관련사전회의
2017/04	대만 난민법 제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2017/10/23~24	APRRN 총회 및 워크샵
2017/10/25	대만 수초우 대한 난민법 제정관련 토론회

2017년 4월 공감은 대만 입법원에서 열린 난민법 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였습니다. 공감을 포함한 외국자문단은 사전에 수차례 전화회의와 이메일 교류를 통해 대만난민법안의, 배경, 주요 쟁점, 관련 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대만의 국회의원 및 여러 정부 관료들이 참가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10월 공감은 대만 수초우 대학에서 대만의 난민활동가 및 연구자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정 과정 및 현황을 소개하고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법을 마련하여 난민을 보호하려는 대만의 시도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공감의 국경을 넘는 자문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사회권협약 및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대응

고문방지협약 심의대응

2016/10	고문방지위원회 등 UN 심의 대응을 위한 NGO 간담회
2016/10~2017/03	64개 시민사회연합 공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17/05/01	NGO 대표단 - 고문방지위원회 비공식 면담
2017/05/02~03	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3-5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7/05/11	UN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사회권협약 심의대응

2017/05~2017/09	UN 사회권위원회 심의대응 사무국 참가
2017/06/25	UN 사회권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2017/06~2017/08	시민사회연합 공동 보고서 작성
2017/09	UN 사회권위원회 심의 참가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국회토론회 발제

UPR 심의대응

2017/03	국내 77개 시민단체 연합보고서 제출
2017/07/28	시민단체 - 정부간 UPR 간담회
2017/09~10	UPR 심의 대비 각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미팅
2017/10/09~13	UPR 심의 대비 각국 주스위스대사관 관계자 미팅
2017/10/12	UPR 대한민국 심의 프리세션 시민사회 발언 참가
2017/11/09	국제인권활동가들 대상 UPR 본심의 공동시청 이벤트 기획 및 진행
2018/01/10	시민단체 - 정부 UPR 권고이행을 위한 간담회

2017년 5월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 현황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제 3-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64개 시민사회 연합의 사무국으로서 독립적인 시민사회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총괄하였고, 엔지오 대표단 일원으로서 본 심의에도 참가하여 위원들과 직접 만나 한국의 인권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후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수사 및 적절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사형제 폐지·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 중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9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협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한국 이행상황을 심의하였습니다. 공감은 74개 엔지오 연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본 심의에 참가하여 위원들에게 한국의 사회권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발표된 최종견해에서 사회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외국인고용허가제상의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업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감은 UN 인권이사회의 독자적인 심의제도인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 연합보고서를 제출하고, UN 회원가입국들이 본 심의에 앞서 시민사회의 공식 발언을 듣는 프리세션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UPR는 UN 회원가입국들이 4~5년마다 한 번씩 다른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현황에 대해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한국은 제3차 UPR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7. 11. 9, UPR 워킹그룹의 본 심의에서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사형제 폐지·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 | | |
|---------|--|
| 2017/01 | 유엔기업인권워킹그룹 수리아 테바 위원 시민사회 간담회 |
| 2017/03 | 기업인권네트워크 - 필리핀 노동자지원센터(WAC) 간담회 |
| 2017/04 | 휴먼아시아 인권과 아시아기업 리더십 세션1 토론 |
| 2017/07 | 제주인권포럼 기업과 인권 토론 |
| 2017/09 | LG전자 CSR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의건 발표 |
| 2017/09 | 로아시아 총회 기업인권 세션 발표 |
| 2017/09 | 일변면 일본 기업과 인권 NAP(국가기본계획) 토론회 |
| 2017/11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 기업과 인권 강의 |
| 2017/12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 OECD 가이드라인과 인권경영 증진 세미나
- 사내 변호사의 직무유리와 인권경영 발표 |

06

취약
노동

아파트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승소

- | | |
|------------|-----------------------------|
| 2017/02 | 고용안정 가이드북 배포 |
| 2017/03 | 대선후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서명운동 |
| 2017/04~11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교육 |
| 2017/08 | 부분적 퇴근제 도입에 관한 경비원 설문조사 |
| 2017/10 |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토론회 |
| 2017/11 | 경비노동자 감염 실태조사, 일자리 안정자금 촉구 |
| 2017/12 | 휴게시간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

아파트 경비업은 최저임금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수년간 꾸준히 인상되어 온 최저임금 덕에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급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만 늘어났을 뿐,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공감이 무급휴게시간에도 쉴 수 없었던 경비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은, 형식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소송은 다행히 대법원에서 승소로 귀결되었고, 원고였던 경비노동자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연말을 맞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비노동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권리보호활동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시작된 경비원 모임은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려는 활동에 함께하는 단체들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많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 어떤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소
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불허한 법무부 상대로 대법원 승소확정을 받아낸다.

제19대 대선과 성소수자 인권옹호

군형법 제92조의 6 위헌소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활동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난민네트워크

군형법 제92조의 6 위헌소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활동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난민네트워크

2017/01/17 군형법 제92조의 6 1만명 서명 입법청원
2017/04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사건 발생
2017/04/13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2017/05/24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법안 발의
2017/07/12 군형법 제92조의 6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발족
2017/08~ 공동대리인단 5차례 회의 진행
2017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2017. 4. 발생한 육군 내 조직적인 동성애자를 색출사건의 배경에는, 군인 신분이라면 영외에서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하더라도 최대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있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을 대표적인 동성애자인권침해 조항으로 보고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감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1만 명 서명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공감은 2017년부터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06~2018/01 네트워크 실무진 회의 7차례 진행
2017/06~09 난민, 성소수자, HIV/AIDS 활동가들의 수다회 3차례 진행
2017/10~11 난민, 성소수자, HIV/AIDS 활동가 대상 교육일정 3차례 진행
2018/01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발간

한국 내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성소수자 난민과 HIV감염인 난민들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난민·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각 지원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소수자난민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공감은 2017년 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각 운동의 의제·역사·활동방식 등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동시에 소수자난민을 맞닥뜨리고 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수다회를 거쳐, 감염내과 의사·감염인, 난민지원 활동가·변호사,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이 다른 분야의 활동가·연구자들 앞에서 각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생생한 활동 경험을 나누는 교육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말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총 100여 명의 활동가·연구자들이 참여한 수다회와 교육일정 속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첫 자료집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이제 시작일 뿐, 2018년에도 연구·사례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감
활동

07

공익법 일반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피해자들 곁을 지키다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개선 활동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피해자들 곁을 지키다

- 2017/05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면담 자문
- 2017/05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수색재개 촉구 기자회견 발언
- 2017/06 가슴기살균제 종합대책 마련 회의 참가
- 2017/07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외교부장관 면담 자문
- 2017/08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수색계속 촉구 기자회견
- 2017/11 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부산해경 만남 자문
- 2017/11 세월호,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족 만남 자문
- 2017/11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대한변협 세월호특별위원회 설립을 주도하고 장기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곁을 지키는 등 재난과 인권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변협 생명안전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민원 1호’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가족, 정부 관계자들, 관련 단체들과 다수의 만남의 갖고, 사실상 중단되었던 수색을 재개시키고 추가로 주변 섬을 수색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색 중단의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고, 관련 외교문서의 열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가슴기살균제 참사에 관하여는 관련 시민사회의 종합대책에 참석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했고, 세월호와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다룰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피해가족들간의 만남, 법안 내용 협상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책임과 무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08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국경을 넘다

자원활동가
민턴십&로스쿨 실무수습
운영

2017/02/13~24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2017/03~07	공감 25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12명)
2017/03~1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강의
2017/04/24	공감 월례포럼 '장애인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_ 김재왕(희망법)·윤정원(건강과 대안) 외 4회
2017/05/1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협약식(3인 지원)
2017/08/07~18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2017/09~2017/02	공감 26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10명)

공감은 설립 초기부터 1년에 2차례에 걸쳐 정기자원활동가 인턴십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간 수많은 자원활동가가 공감을 거쳐 사회 각계 영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25기(12명), 26기(10명)이 자원활동가 인턴십에 참여하여 공감의 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26기부터는 기존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던 것을 추첨 선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원활동가 선발에 더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공감은 현재 전국의 23개 로스쿨과 실무수습 협약을 체결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매년 십수 명의 로스쿨생들의 실무수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은 2주 동안 공감의 영역별 활동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공감과 관련된 현장단체에 방문하며, 공익사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공익·인권실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교육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국경을 넘다

2017/02/01~03	예비법조인 대상 제10회 공감 인권법캠프
2017/02/22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등 3회
2017/02/24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외 1회
2017/02/28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회의
2017/03/16,23	재단법인 동천 NPO법률지원단 양성과정 강의
2017/05/31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
2017/06/28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외 1회
2017/07/13~14	공감 여름 인권법캠프
2017/11/09~10	제4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

공감은 매년 일반 대학생 및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2차례에 걸쳐 인권법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시작된 공감의 인권법캠프는 어느덧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감의 인권법캠프나 자원활동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간 이들 중 여럿이 공익전담변호사가 되었고, 인권감수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이 아니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상식이 통하고 차별·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2011년부터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는 제목으로 여름·겨울방학 2차례에 걸쳐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중·고생들과 함께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내 주위에 숨은 차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의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미래에 공익변호사로서 멋지게 활동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2017/04	공감과 공익변호사에 관심 있는 대만변호사들과의 만남
2017/09	한국의 새로운 공익인권활동 변호사 모델 일본변호사 토론회 강의
2017/09	BABSEA-CLE 주최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말레이시아) 참가
2017/10	공익법네트워크(PILNET) 글로벌 프로보노 포럼(헝가리) 참가 - 세계 공익활동중개단체회의 & 로펌 공동회의, 공익법네트워크(PILNET) 전략회의 참가, 한국의 프로보노 발표
2017/12	몽골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컨퍼런스 공감 소개

공감은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그룹으로서 다른 법률가들과 함께 공익인권법운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매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공익변호사의 다양한 형태, 공익변호사그룹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집단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공익변호사의 조직과 활동 소개의 장을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련했습니다. 4월에는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Clarence Chow 변호사님 소개로 공익법단체, 법률구조공단, 로펌에서 일한 대만 변호사들과 공감 및 공익변호사단체의 조직, 운영,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9월에는 일변연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김창호 변호사 소개로 20여 명의 일본변호사(재일동포변호사 포함)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월에는 몽골변호사협회로부터 프로보노 컨퍼런스에서 공감 활동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직접 참석은 못하고 공감 활동 영상이 컨퍼런스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아시아 내의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감이 걸어온 길

2004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 시작
제1회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시작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05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업

2006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한국장애인인권 수상, 제20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2007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2008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에 대한 변호/무죄 선고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9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2010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에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11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법조언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2013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4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기획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문' 수상

2015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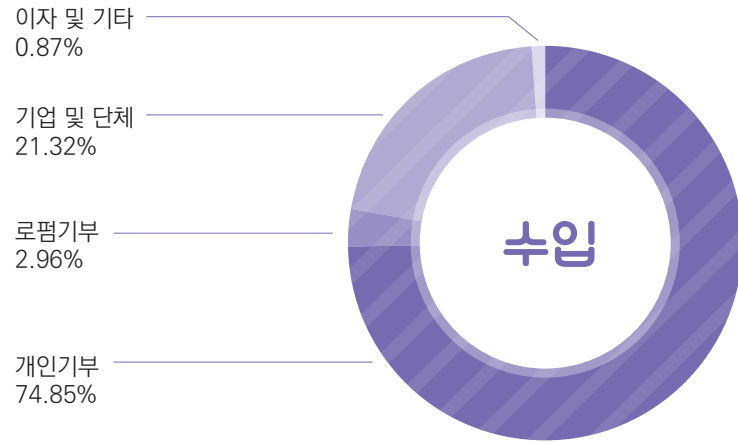
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 위헌제정 신청 - 헌법불합치 결정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2017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률대리한 삼표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공감 살림살이



816,573,000 개인기부

32,320,000 로펌기부

232,617,000 기업 및 단체

9,495,000 이자 및 기타

1,091,005,000 합계

554,827,000 인건비

218,476,000 사업비

93,024,000 운영비

866,327,000 합계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99,000
세금과공과	21,075,000
지급수수료	11,510,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3,995,000
사무실유지비	27,425,000
소계	93,024,000

사업비	
교육·중개	17,147,00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96,000,000
법률교육/지원	1,175,000
소송 지원	4,724,000
인권법캠프	17,914,000
월례포럼	2,270,000
연구조사	24,370,000
회원관리	48,397,000
홍보	6,479,000
소계	218,476,000

공감 나눔밥상

참 고맙습니다.

다음 나눔밥상에서 다시 만나요!

두 번째로 나눔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은 처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고 매일매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채우고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공감 김수영 변호사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별로 색을 드리고 그 색에 맞추어 소개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빨강, 주황, 노랑... 각 테이블별로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공감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요. 김지림, 소라미, 윤지영 변호사가 본인이 활동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공감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느끼는 대로만 함께해 주는 것!!”

구성원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감사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날씨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걸음 두 시간이 넘도록 넘치게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 순서 순서마다 성의를 다해 참여하는 마음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묵직한 응원이 공감에 커다란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전수안 이사장

변연식 이사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공감은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강승수 이사

김유니스 이사

한상희 이사

홍진표 이사

공감의 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억울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불가능할
그 꿈을 이루세요!

신경숙 이사

데이빗 워터스 이사

힘이 없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열적으로 힘쓰는
공감의 일꾼들에게
진정한 격려와 지원을
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김영준 이사

오종석 감사

윤재윤 이사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공감 15년차,
좀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엄형국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호프 자런, <랩 걸>)

차혜령



변화는
더더 보여도
멈추지 않으며,
방향은 결국
더 나은 시대로
향해 있습니다.
담대한
낙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수영



비워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다 채우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은
처음과 같다.

박영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해를
꾸리겠습니다!

김지림



늘
같은 길,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옥미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건고
또
건습니다.

소라미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윤지영



그 겨울
지나고
봄.
그래도
변하지 않은
자리에서
여전히
삼질 중이다.

장서연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용기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본다.

황필규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임기화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안주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7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인
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뚜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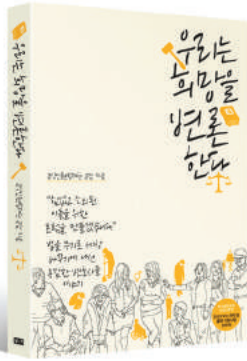
후원 계좌 안내

KEB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앓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블로그 withgonggam.tistory.com

홈페이지 www.kpil.org